우암학원 창학 76주년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光州日報
74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685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월 8일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 "청사·재정 등 촘촘한 설계…광주·전남 통합 갈등 줄여야"

## 창원시·청주시 '행정통합 백서' 분석

### 거대 지자체 탄생에 파열음도 커
### 화학적 결합 위한 선결 과제 산적
### 단체장 주 소재지 기싸움 불가피
### 재정 융합 따른 예산 배분도 중요
### 기피시설은 '주민 공모제' 활용을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사상 첫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결합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통합이 정부의 '5극 3특' 정책으로 탄력을 받고 있으나, 매머드급 지자체의 탄생이 불러올 시행착오와 혼란에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광주일보가 과거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행정통합을 이룬 창원시(마산·창원·진해)와 청주시(청주·청원)의 백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광주와 전남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폭발력이 큰 뇌관은 통합 특별시의 심장부인 청사 소재지 결정 문제다. 다행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존 광주시청과 무안 남악신도시 도청, 동부청사 등 3곳의 청사를 고루 활용한다는 큰 틀에는 뜻을 모았다.

하지만, 통합단체장이 주로 머물며 핵심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른바 주 소재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창원통합사 백서를 보면, 창원시는 통합 준비 과정에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두고 별도 공모와 여론조사, 공청회까지 거쳤음에도 갈등 의제로 변질됐다. 단체장의 주 소재지가 한 곳으로 쏠리면 소외된 지역의 상실감이 통합 무용론으로 직결될 위험이 다분하다.

막대한 예산이 합쳐지는 재정 융합 과정의 셈법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청주·청원 통합백서 발간용역 자료에 따르면, 청주와 청원은 상생 합의안 75개 세부 사업을 정리하면서도 예산 비율 및 기간 등 핵심 쟁점은 추가 협의 대상으로 남겨둬야만 했다. 군민 1인당 예산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청원군민의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다.

창원시 백서 역시 통합준비위가 재정 인센티브 배분 비율을 창원 20%, 마산 40%, 진해 40%로 정했으나 청사 위치에 따라 배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이 드러나 반발을 샀고, 정부에서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 규모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축소돼 실망감이 커졌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간 7조원, 8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합할 경우 예산 배분을 둘러싼 파열음이나 정부의 지원 축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농 복합형 지자체 통합에 따른 주민 기피 시설 집중 배치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현안이다. 청주·청원 백서는 통합의 단점과 우려 사항으로 혐오시설의 청원 집중 입지를 꼽으며, 대안으로 공정한 입지 선정과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주민 공모제와 같은 장치를 제시했다.

행정 경계가 사라지면 쓰레기 소각장이나 하수처리 시설, 추모 시설 등 대도시에서 꺼리는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전남 외곽 지역으로 무더기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전남도민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광주시와 전남도는 사상 초유의 광역 단위 통합이라는 미지의 길을 걷고 있다. 통합선행 지자체들의 시행착오를 참고해 전남광주 통합을 안착시킬 정교한 방어막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광주와 전남이 합의한 청사 3곳 균형 활용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본청의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고, 예산 배분과 기피 시설 입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 촘촘히 설계해 광역 통합의 연착륙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행안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브라질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 '호남권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 본격화

## 광주시·전남도, 공동추진위 출범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축이 될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에 나섰다.

광주의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전남의 백신·면역치료 자원을 결합해 제약 바이오와 첨단 의료기기 생산 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호남권 바이오헬스복합단지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선경 K-헬스미래추진단장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의료계와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추진위 출범은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국내에는 대구와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돼 있으나,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과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는 호남권만의 특화된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호남권 첨복단지'(가칭)는 기존의 대규모 집적형 단지에서 벗어나, 이미 조성된 복수의 의료 인프라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강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목표한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거점병원 반경 13㎞ 내 인프라를 연계해 투자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기존 방식과는 차별화된 '저비용·고효율' 모델로, 화순의 백신산업특구와 광주의 AI 거점을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전남의 지역 역량을 반영한 감염병 백신과 면역 치료제 AI기반 바이오헬스기기, 첨단치료·재생 의료 기기 특화 단지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안도걸 국회의원과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신설'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계류 중으로 공동추진위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대응과 정책 지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연말까지 세부 조성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2면으로 계속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도 교복담합 의혹…전수 조사 촉구 ▶6면
엄마기자 육아일기-돌봄공백 부모에 기대기 ▶18면
광주FC 김윤호 "올 시즌 5골 쏜다" ▶22면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